

2017~2019년 8월 발주자별 실적 (단위:억)



‘규제한파’ 8월 수주액 6년 만에 9兆 밑으로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 감소 영향
민간부문 전년 대비 20% 추락
건설활성화 이끌 민자 대책 시급

민간 건설수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아울러 전체 건설수주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건설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13일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가 발표한 월간 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8조998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월(10조5678억원) 대비 14.8% 감소한 수치다. 8월 수주액이 9조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공공(2조8811억원)은 전년 동월 대비 0.5% 증가했지만, 민간이 발목을 잡았다. 6조1174억원으로 무려 20.6%나 감소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줄어든 여파라고 건설업은 진단했다.

실제 8월 기준으로 올해 민간건축 누적 수주액은 55조6032억원이다. 2017년(63조107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11.9%가 줄어들었다.

민간의 위축은 전체 건설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8월까지 올해 전체 누적 수

주액은 91조4101억원으로 지난해(94조5283억원) 대비 3.3%, 2017년(102조4434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2017년만 놓고 보면 민간 수주액의 감소가 전체 수주액의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사실 올해 건설수주액 추이를 살펴보면 3~4월 일시적 반등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에는 무려 21.6%가 빠지기도 했다.

전망도 어둡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 및 건설투자는 2018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주택인허가 및 착공실적도 2015년을 정점으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올해 8월 누적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18.2% 줄었고, 착공실적은 10.6% 감소했다.

건설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민간 건축 부문의 하방압력, 인허가 지표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향후 수주 시장 및 건설 투자 시장은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정부가 SOC 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의 정책기조를 전환했지만, 민간의 투자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활성화는 반쪽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